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법원 “특검 재판 총력 지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판사 1명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 담당
법관·주무관 등 인력 충원·형사 법정 증설…재판 중계팀 구성도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앙지법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새로 접수된 사

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합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돼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법원은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형사 법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고·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내 형사법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협의 하에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 국힘 당사 3번째 압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검사팀이 1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당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기재부 분리·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 25일 본회의의 처리 방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폐지라는 사법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

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경제부처의 체계도 크게 손질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청 승격 등 행정 전반의 조직 개편안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분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확대 개편된다.

법안소위는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일부 조정만 거친 뒤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연계된 후속 입법,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약탈적 대미 투자 거부하고 원점 재협상을”

진보당 광주시당, 美 일변도 외교 폐기·자주노선 전환 촉구

진보당 광주시당이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국익 약탈’로 규정하며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구금 피해 국민의 법적 지원과 함께 미국 일변도 외교를 폐기하고 자주적 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18일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이민국이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쇄사슬과 수갑으로 불법 연행한 것도 모자라 일주일 넘게 열악한 시설에 구금했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투자 규모는 6000억 달러(827조6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500억 달러(483조5000억 원)는 미국이

정한 법인에 송금하라는 일방적 강요”라며 “이한 해 국내총생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 소득을 빼앗아가는 약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올려 한국 수출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미 이민국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약탈적 대미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 대미 종속 외교를 폐기하고 자주적 노선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혁신당, 성 비위 사건 ‘윤리감찰단’ 신설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윤리감찰단을 신설한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가 될 것이다.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실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법부 파괴·법원 장악 반대” 국민의힘 광주시당 서명운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사법부 파괴 및 법원 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힘 광주시당은 10월 말까지 송정역, 터미널, 대학가, 젊음의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대를 설치하고 거리 호소 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법치 훼손과 헌법 질서 파괴를 시민에게 알리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